

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6. 8.(화) 10:00	배포일시	2021. 6. 8.(화) 08:00
담당과장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(044-215-5740)	담당자	김영웅 사무관 ssuper84@korea.kr 김선영 사무관 ksunny3@korea.kr
	국고국 국채과 박재진(044-215-5130)		최시훈 사무관 choishihoon@korea.kr
	국고국 계약정책과 손창범(044-215-5210)		이윤정 사무관 leeyounjung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(044-215-5330)		한재수 사무관 han142857@korea.kr
	예산실 예산정책과장 김태곤(044-215-7130)		하치승 사무관 hcs017@korea.kr
	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최영전(044-215-4120)		정지운 사무관 jjun.chung@korea.kr
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1년 6월호 (‘21.4월말 기준)

- ◇ **적극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 및 세수 호조세로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(전년동기대비 +27조원)**
- ◇ **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, 고용안정·일자리 창출, 소득·주거 안정, 신산업 육성 사업 등 적극 집행**
- 1분기 저소득층 가계의 총소득 증가, 4월 소년영종 고용률 증가, 1분기 기술창업 개수 역대 최대치,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

- 기획재정부는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6월호를 발간하여 4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 및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 등 발표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월 기준 재정동향에 대해,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되어
 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,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
 - 다만,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, 경기회복 공고화와 新양극화의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

- 조세연에서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6월호에 기고한 ‘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’에서 나타났듯이,
 - 최근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책도 코로나 위기과정에서 드러난 고용·소득분배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는 등 재정정책의 공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
- 아울러,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대로 금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,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 될 것으로 평가

□ 한편, 6월호의 주요재정 이슈로는,

- ① 코로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
- ②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한 한국 혁신자본의 글로벌화
- ③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
- ④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정책 방향
- ⑤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외부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기고문을 게재하였음

['21.4월(누계기준) 재정운용동향]

- ◇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와 이에 따른 세수 호조세로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
(‘20.4월 누계 △43.3조원 → ‘21.4월 누계 △16.3조원, +27조원)
- (총수입, 217.7조원) 4월말까지 전년대비 진도율 +10.3%p, 지난달에 이어 개선흐름 지속
 - (국세)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, 자산시장 호조, 세정지원 기저효과* 및 우발세수로 인해 전년대비 32.7조원 증가
 - *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(+8.8조원) 제외시 전년대비 +23.9조원 증가 수준
 - (세외·기금수입)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증대,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8.6조원 증가

- (총지출, 234.0조원) 코로나 피해 지원, 일자리 유지·창출, 저소득·서민·청년 등의 소득 및 주거안정, 민간경기 활성화 등 예산의 적극 집행으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3.0%p 증가(+24.3조원)
- (재정수지)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개선(+27.0조원) ('20.4월 △43.3 → '21.4월 △16.3조원)

< 주요항목별 진도율('21년 4월말 누계) >



□ (총수입, 217.7조원)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등 국세,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10.3%p 증가

- ① (국세, 133.4조원) ①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, ②자산시장 호조, ③기저효과* 및 우발세수 등으로 진도율 11.9%p 증가(+32.7조원)

*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(+8.8조원) 제외시 전년대비 +23.9조원 증가 수준

- (①경기회복)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(+8.2조), 부가가치세(+4.9조) 등이 전년대비 +15조원 증가

* '21년 성장률 전망('20년말→최근, %): (한은) 3.0 → 4.0 (KDI) 3.1 → 3.8
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 개별기준): ('19) 56.3 → ('20) 67.5 <+19.8%>

- (②자산시장 호조) 부동산·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(+3.9조), 증권거래세(+2조) 등이 전년대비 +7조원 증가

* 주택매매거래량(만호): ('19.11월~'20.3월) 53.6 → ('20.11월~'21.3월) 53.7 <+0.1%>
증권거래대금(조원): ('20.1분기) 928 → ('21.1분기) 2,001 <+116%>

- (③기저효과·우발세수) 이월납부·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*(+8.8조), 상속세 등 우발세수(+2조)로 전년대비 +11조원 증가

* ①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에 이월되어 납부(예: 종합소득세, 교통세 등),
②작년 1~4월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로 유예되어 비교대상인 작년 1~4월 납부세액 감소(예: 법인세, 부가가치세, 교통세 등)

- ② (세외수입, 13조원) 2월, 4월에 각각 年1회 세입조치 되는 한은잉여금(+1.4조원) 및 정부출자수입*(+0.3조원)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5.0%p 증가(+2.4조원)

*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('19년, △3.6조원 → '20년, 2.0조원) 및 평균배당성향 확대(32.58%→36.92%, +4.34%p) 등에 기인

- ③ (기금수입, 71.3조원) 국민연금,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(+14.3조원)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8.6%p 증가(+16.2조원)

(조원, %, %p)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
	추경(A)	결산(B)	4월(C)	4월 누계(D)	추경(E=D/A)	진도율(F=D/B)	추경(G)	4월(H)	4월 누계(I)	진도율(J=I/G)	4월(H-C)	누계(I-D)	진도율(K=J-I)	결산(L-F)
□ 총수입	470.7	478.8	46.8	166.3	35.3	34.7	483.0	65.5	217.7	45.1	18.7	51.3	9.7	10.3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31.2	100.7	36.0	35.3	282.7	44.9	133.4	47.2	13.8	32.7	11.2	11.9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30.5	98.4	36.2	35.6	274	43.0	129.1	47.1	12.4	30.6	10.9	11.5
- 소득세	88.5	93.1	6.6	28.8	32.5	30.9	89.8	8.0	36.7	40.8	1.5	7.9	8.3	9.9
- 법인세	58.5	55.5	6.4	21.7	37.1	39.1	53.3	9.8	29.9	56.2	3.4	8.2	19.0	17.1
- 부가가치세	64.6	64.9	14.5	29.5	45.6	45.4	66.7	16.8	34.4	51.6	2.3	4.9	6.0	6.2
- 교통세	15.5	13.9	△0.0	3.7	24.2	26.8	15.7	1.6	6.3	40.4	1.6	2.6	16.2	13.6
- 관세	7.7	7.1	0.5	2.2	28.5	31.1	8.3	0.7	2.4	28.5	0.1	0.2	0.1	△2.6
- 기타	37	41.8	2.6	12.5	33.7	30.0	40.2	6.1	19.4	48.2	3.5	6.8	14.5	18.2
○ 특별회계	7.8	9.3	0.6	2.2	28.5	24.1	8.7	2.0	4.3	49.5	1.3	2.1	21.1	25.5
◇ 세외수입	29.1	26.9	2.0	10.6	36.4	39.3	29.3	2.9	13.0	44.3	0.9	2.4	8.0	5.0
◇ 기금수입	161.9	166.2	13.6	55.1	34.0	33.1	171.0	17.7	71.3	41.7	4.1	16.2	7.7	8.6
(사보기금)	95.8	100.0	7.9	32.1	33.6	32.2	99.5	11.2	46.4	46.7	3.3	14.3	13.1	14.5

□ (총지출, 234.0조원) 코로나 피해 지원, 일자리 창출, 소득·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3.0%p 증가(+24.3조원)

- ① (예산) 긴급고용안정지원금(+0.7조원), 청년일자리 창출지원(+0.3조원) 등 일자리 안정 지원, 사회안전망 강화*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.4%p 증가(+7.2조원)

* 기초연금(+0.1조원), 주거급여(+0.3조원), 고등학교 무상교육(+0.2조원) 등

- ② (기금)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경감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(+0.4조원), 고용안정·창출 지원* 강화,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**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5.5%p 증가(+14.9조원)

*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(+0.9조원), 고용유지지원금(+0.6조원) 등

**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(+0.2조원), 민간임대 융자(+0.2조원), 다가구매입임대 융자(+0.9조원) 등

(조원, %, %p)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4월 (당월 C)	4월 (누계 D)	진도율		추경 (G)	4월 (당월 H)	4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4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지출	554.7	549.9	44.8	209.7	37.8	38.1	572.9	51.8	234.0	40.8	6.9	24.3	3.0
○ 예산	377.5	374.4	29.7	150.3	39.8	40.1	382.3	34.4	157.5	41.2	4.7	7.2	1.4
- 일반회계	323.5	320.8	26.1	126.8	39.2	39.5	321.6	29.2	131.4	40.9	3.1	4.6	1.7
- 특별회계	54.0	53.6	3.7	23.5	43.5	43.8	60.8	5.2	26.1	42.9	1.6	2.6	△0.6
○ 기금	177.3	175.2	15.0	59.3	33.5	33.9	190.6	15.0	74.2	38.9	△0.0	14.9	5.5
(사회보장성기금)	61.2	59.1	4.7	18.9	31.0	32.0	62.9	5.5	22.4	35.5	0.9	3.4	4.6
○ 세입세출외	-	0.4	0.1	0.1	-	21.2	-	2.3	2.3	-	2.3	2.3	-

집행관리 대상사업, 343.7조원

- 4월까지 집행률은 45.4%(156.0조원)으로 전년대비 0.7%p 증가
- 특히, 일자리 분야 사업은 평균(45.4%)을 상회하는 집행을 (57.8%) 및 조기집행 목표(6월) 대비 86.8% 진행률 달성

(단위 : 조원, %)	규모	4월 집행(A)	(%)	조기집행 목표(B)	(%)	진행률(A/B)
일자리	13.6	7.9	57.8	9.1	67.0	86.8
SOC	54.2	24.6	45.5	33.6	62.0	73.2
생활SOC	11.0	5.0	45.5	7.2	65.5	69.4
한국판 뉴딜	22.5	11.6	51.5	15.8	70.0	73.6

- (재정수지)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,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개선(+27조원)
(‘20.4월 누계 △43.3 → ‘21.4월 누계 △16.3조원, +27조원)

(조원, %, %p)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4월 (당월 C)	4월 (누계 D)	진도율		추경 (G)	4월 (당월 H)	4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4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수입(A)	470.7	478.8	46.8	166.3	35.3	34.7	483.0	65.5	217.7	45.1	18.7	51.3	9.7
◇ 총지출(B)	554.7	549.9	44.8	209.7	37.8	38.1	572.9	51.8	234.0	40.8	6.9	24.3	3.0
◇ 통합재정수지 (C=A-B)	△84.0	△71.2	1.9	△43.3			△89.9	13.8	△16.3		11.8	27.0	
◇ 사회보장성 기금수지(D)	34.6	40.8	3.2	13.2			36.5	5.6	24.1		2.4	10.9	
◇ 관리재정수지 (E=C-D)	△118.6	△120.0	△1.2	△56.6			△126.4	8.2	△40.4		9.4	16.1	

- (국가채무) 1~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.6조원으로, 年 발행한도 (186.3조원)의 36.8%를 평균조달 금리 1.62%로 안정적 소화

* 4월 국가채무 잔액 : 880.4조원(국고채 787.3, 주택채 80.0, 외평채 9.7 등)
(‘21.3월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 : 938.4조원)

- 외국인·보험사·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, 특히, 외국인은 1~4월 중 12.8조원 규모로 국고채 순투자

* 1~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‘18)+5.6 (‘19)△0.8 (‘20)+12.1 (‘21)+12.8

** 4월 기준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.1%

【주요 재정사업 및 성과 (4월말 누계 기준)】

- ◇ 4월까지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,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, 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두어 재정을 적극 집행
- 1분기 저소득층 가계의 총소득 증가, 4월 소년영양고용률 증가, 1분기 기술창업 개수 최대치,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등 성과

□ 코로나 피해지원 및 사회 안전망 확대

- (긴급피해 지원)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, 농어가 등에 대한 피해지원 집중 추진
- 집합금지·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 플러스자금 4.5조원* 집행(4월말)
- * 6월2일 기준, 소상공인 286만명에게 4.7조원 지급 완료
-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·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0.7조원, 영세 농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0.1조원 지원(4월말)
- * 5월27일 기준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(3차(‘21.1~3) 지원인원 68.2만명, 4차(‘21.3~5) 71.5만명)에게 0.8조원 지급 완료
- (소득·주거 안정 지원) 취약계층 소득 개선,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여, 국민의 ‘삶의 질’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대
-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(노인)·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(1월~, 25→30만원)하고, 4월말까지 5.8조원 지원

- 노인·한부모 가구 지원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4월까지 생계급여 대상을 +6.3만명 확대·지원(1.9조원)
 -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·전세자금 융자 등 주택자금(8.8조원), 저소득층 청년* 등 주거급여 대상 확대·지원(1.0조원)
- *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

※ 코로나 영향으로 1분기 저소득층(1분위)의 근로·사업소득은 감소하였으나, **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등 이전소득 증가로 총소득은 증가**

* 1분위 소득항목별 증감률(전년비, %, '21.1/4분기 가계동향) :
(전체) +9.9 (근로) △3.2 (사업) △1.5 (이전) +15.8

□ 일자리 기회 창출 및 고용안전망 강화

- (일자리 창출) 신산업분야에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혁신 인재양성(0.5조원), 청년추가고용 장려금(0.9조원) 및 노인일자리, 사회활동지원(0.9조원)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

※ 4월말 기준 올해 목표(104만개)의 91% 수준인 **95.2만개의 직접일자리 창출**

- (고용유지·안전망 강화) 청년층 등의 고용안정·확대와 고용유지·창출시 기업부담 완화,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추진
-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·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(0.4조원),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 유지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(0.6조원) 등 집행
- 실직자·산재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(4.3조원), 산재보험급여(2.2조원)를 차질없이 지원

※ 4월 소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개선, 취업자 수는 3월 대비 2배 이상 증가, 특히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은 2개월 연속 증가(4월 고용 동향)

* 4월 고용률 등락(전년비, %p) : (청년)2.6 (30대)0.2 (40대)0.6 (50대)1.4 (60세 이상)1.5
* 취업자(만명, 전년비) : ('20.11)△27.3 (12)△62.8 ('21.1)△98.2 (2)△47.3 (3)31.4 (4)65.2
* 청년층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1)△31.4 (2)△14.2 (3)14.8 (4) 17.9

□ 신산업육성 기반 마련,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경기 활성화

- (신산업육성)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신산업육성 기반을 강화 하도록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, R&D·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(0.3조원),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융자(1.3조원) 등 역점 집행

※ 코로나19 확산에도, 기술기반 업종 창업이 전년대비 5.1% 증가하여 역대 1분기 사상 최초 6만개 돌파 (1분기 창업기업 동향)

* 1분기 월별 창업 증감률(% 전년동기대비) : ('21.1) △45.1 → (2) △15.9 → (3) **16.7**

* 1분기 기술창업(개) : ('18) 56,129 → ('19) 58,694 → ('20) 58,892 → ('21) **61,882**

- (소상공인 지원) 방역규제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라인 판로진출(스마트 상점·공방·수퍼 등) 및 업종전환·재창업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(0.1조원), 경영자금 융자(0.8조원) 등 집중 집행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호(배포용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길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 고

6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」(붙임)에 게재

① 코로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(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)

□ 최근의 경제·재정여건

- (경제여건) 수출 회복세가 뚜렷하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으며, 고용도 점차 회복되는 등 V자 회복 전망
- (재정여건) 경기회복세에 따라 올해는 세수증가로 재정수지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,
 - 중장기적 시계에서 보면,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고 인구구조 변화, 4차산업혁명, 소득 양극화 등 미래 경제·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소요 지속 증가 전망

□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

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 필요

-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 감안 시 수출·투자가 견인중인 現 경기회복 국면에서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필요
- '08~'09 경제위기* 교훈을 반영하여 세계 경기회복이 마무리되는 '22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
- * 미국유럽 등이 위기 직후 단행한 재정건전화 조치는 경제회복 저해요소로 작용(IMF)

②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회복탄력적인 재정운용의 틀 구축 필요

- 고령화 등으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복지지출 증가 등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위협 요인
- 합리적 수준에서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대하고, 지출구조혁신 병행 노력이 필요하며, “적재적소에 국민 부담을 투입하는 재정의 기본원칙”에 입각한 재정운용의 틀 구축이 중요

②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한 한국 혁신 자본의 글로벌화 (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)

- 디지털 대변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각국의 전방위적 혁신 경쟁에서 실리콘 밸리를 앞세운 미국이 주도중
 - ※ 대학·연구소 원천기술 연구 + 인재 + 실리콘 밸리의 혁신 생태계 기반
 - 실리콘 밸리 혁신생태계는 창업자+벤처캐피탈+교수·연구원+기업 간의 네트워크로 작동하고, 벤처캐피탈이 핵심 역할 수행
 - 벤처캐피탈은 혁신 네트워크에서 창업자에게 단순 자본 공급(Dumb money)이 아닌 능동적 투자(Smart money, 비즈니스 모델+인재+협력 네트워크 등 무형자산을 함께 제공) 담당
 - 벤처 로펌은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을 압축한 표준 계약서로 네트워크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제공
- 창업자가 새로운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◇ 70년대초 설립되어 샌드힐 로드를 실리콘 밸리 벤처캐피탈의 중심지로 만든 '클라이너 퍼킨스'와 '세콰이어' 캐피탈은 반도체 등 기술기반 인재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인텔, AMD, 애플, 오라클 등 많은 기업에 투자하여 성공시킴

→ 시장 통찰력을 가진 벤처캐피탈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창업자와 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시킨 대표적 케이스

- (성공 요인) “창업자(아이디어·기술력) + 경영자(전문적 비즈니스 모델) + 벤처캐피탈(자본·네트워크)”의 시너지 효과
- 한국 벤처의 성장을 위해서는 ‘창업자 = 경영자’라는 등식을 분리하고, 혁신자본의 글로벌화가 필요
 - *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'20.6월 독일 바이오엔테크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수익 창출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조기 확보하는데 일조
- 시장·기회 확대를 통해 벤처캐피탈의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쇄(serial) 창업자*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* 벤처 창업 후 기업 육성은 전문경영인, 다른 기업 등에 넘기고 아이디어·혁신으로 또 다른 벤처를 창업

③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(조세연 재정지출혁신센터)

- (재정기조) 대부분의 국가에서 **경제회복세**를 **공고화**하기 위해 단기에는 **확장재정** 기조 유지, 중기에 **재정건전성** 확보 노력 강화

< 주요국 재정기조 >

독일 (FY21)	· ('21년) '20년(결산) 대비 수지 적자폭 확대 (20년 △4.2%→'21년 △9.0%)하며 확장재정 · (중 기) '23년부터 수지적자 한도 (GDP대비 0.35%)를 재적용하며 건전성관리 강화 ※ (분석자료) 2021년 추경예산안('21.4월), 2021년 안정화프로그램('21.4월)
프랑스 (FY21)	· ('21년) '20년(결산)과 유사한 수준으로 큰 폭의 수지적자 유지 (20년 △9.2% '21년 △9.0%) · (중 기)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'22년이후 지출증가율을 0.7% 이내로 제한 ※ (분석자료) 2021년 예산안('20.9월), 2021년 안정화 프로그램('21.4월)
일본 (FY21)	· ('21년) '20년(결산)보다 작지만 여전히 큰 폭의 수지적자 유지 (20년 △14.3%→'21년 △8.6%) · (중 기) 세입·세출 개혁 지속 → '25년 이후에는 수지 적자를 △1%대로 개선 ※ (분석자료) 2021년 예산안('20.12월)
영국 (FY21)	· ('21년) '20년(결산)보다 작지만 여전히 큰 폭의 수지적자 유지 (20년 △13.3%→'21년 △7.6%) · (중 기) '23년부터 법인세율 인상 (19%→25%) 등 재정건전화 정책 본격 추진 ※ (분석자료) 2021년 예산안('21.3월)
미국 (FY22)	· ('22년) '20(결산)'21년 대비(추가부양책 포함) 재정지출·적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큰 폭의 재정적자 유지 , 대통령예산안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* 재정지출(예산안 기준/추가부양책 포함) : ('20) \$4.7조/\$6.6조 ('21) \$4.8조/\$7.2조 ('22) \$6.0조 재정적자(예산안 기준/추가부양책 포함) : ('20) △4.9%/△14.9% ('21) △4.1%/△16.7% ('22) △7.8% · (중 기) '22년 △7.8% → '25년 △5.5% 로 점차 재정수지 안정화 ※ (분석자료) 2022년 예산안('21.5.28)

※ 중국은 '21년부터 **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을 중단**하고 **재정적자규모를 축소**해 나가는 등, 미래 대비 **재정여력을 확보**하겠다는 입장을 표명

- (중점투자방향) **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결 +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비 투자**에 중점

- (구조적문제 해소) 노인·여성·청년 등 **취약계층 보호 강화**, **고용지원 확대**, **보건의시스템 강화**(병상·요양시설 확대 등) 등
- (미래대비) **기후친화적 경제로의 전환**, **디지털 개혁**, **유망산업** (바이오·항공·AI 등) **육성**, **기업경쟁력 강화** 등

→ (시사점) 당분간은 **구조적 문제 해결** 및 **포스트코로나 시대** 대비를 위한 **재정투자**에 우선순위 둘 필요, 다만 **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**을 유지하기 위한 **재정혁신** 노력도 지속

④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정책 방향 (손창범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)

- (공공조달 정책 현황) 공공조달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, **코로나19**의 영향으로 **전략적 공공조달**로 전환

< 전략적 공공조달(Strategic Public Procurement) >

- ▶ (개념) 공공조달의 전통적 가치인 구매효율에서 나아가 조달을 통한 **기술혁신**, **경제성장**, **사회적 가치 실현** 등을 추구하는 **신개념의 공공조달 트렌드**
- ▶ (4대 전략) ①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
②기술혁신,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혁신조달 활성화
③국가계약제도 혁신
④효과적인 조달정책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

- (계약제도 정책 방향)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(위원장: 2차관)를 중심으로 **계약제도를 혁신**하여 공공조달의 **근본체질 개선**

- ① **혁신·신산업 성장지원** : 공공조달의 **선도적 구매자(First Buyer)** 역할 강화, 신기술·신산업에 대한 **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** 등
- ② **제도 유연성·효율성 향상** : **계약목적·내용**에 따라 **적합한 계약방식**을 선택·활용할 수 있도록 **유연한 접근** 시도
- ③ **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** : 발주기관 **미질 방지** 등 **공정계약** 정착, **신속한 계약분쟁 조정**, **중소기업 부담 완화** 등

< 국가계약제도 개선방향 및 주요 개선사례 >

	제도개선 방향	주요 사례
1	혁신·신산업 성장지원	▶ 혁신제품 사용결과에 대한 면책 확대 ▶ 디지털서비스 전용 계약트랙 신설
2	제도 유연성·효율성 향상	▶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종전대비 2배 상향 ▶ 공공계약 샌드박스 제도 도입
3	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	▶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▶ 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범위 및 최소금액 확대

5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(김태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)

- (협업 필요성) 현대사회에서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분업적 '협력'이 아닌 공동 목표를 위해 집단 노력하는 '협업'의 중요성 확대
 - 정책여건 다변화로 관료조직이 복잡해지며 조직간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사일로(silo) 현상이 확산
 - 소니뮤직과 워크맨의 몰락, 9.11테러 사전파악 실패 등은 협업 실패에 기인하며, 아티스트간 콜라보레이션은 협업 성공 사례
- (협업예산) '21년 예산부터 ①유사중복 사업 조정, ②정책지원 사각지대 해소, ③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협업예산 제도 도입
 - 디지털 인력양성, 신약·의료기기 개발, 그린 스마트스쿨 등 12대 중점 협업과제를 선정하고, 관련 예산을 30% 이상 증액
 - '22년은 협업예산 제도를 안착·확산시켜, 부처간 '협업'을 선도하고 강하고 유능한 정부로 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

「'22년 협업예산 편성 방향」

5대 전략	주요 내용
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부처, 전문가, 정책수요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과제 발굴 ▶ '22년 예산으로 미래혁신인재 양성, 국산 백신개발 및 생산 허브 구축, 자영업 구조전환 대응 등 17개 중점 과제 추진
② 부처간 공동목표 의식 공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협업과제 포함된 우수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우선반영, 기존사업 대폭 증액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▶ 다부처 협업 성과관리 시범 추진
③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협업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관부처 중심 TF 등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 복합적 협업체계도 구축
④ 재정운용 전과정에서 협업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기획-편성-집행-평가 전 과정에서 협업 추진 ▶ 예를 들어 집행시 공동사업단 구성, 공동 사업공고 등 수행
⑤ 성과 중심 예산 운용 뒷받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단순히 예산 증액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대상사업간 우선순위 조정, 증액·축소 병행